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94
----------	------

발의연월일 : 2020. 8. 7.

발 의 자 : 노웅래 · 김민기 · 장철민
김홍걸 · 윤재갑 · 양정숙
윤미향 · 양이원영 · 김승남
김수홍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연간 1밀리 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침대, 라텍스, 베게 등 여러 제품분야에서 다수 확인되는 등 생활제품 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결함 가공제품의 구체적인 폐기기준이 없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폐기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폐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수거·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공동으로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서 그 사실을 공개하고,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행하도록 하며,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면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3항).
- 나. 제조업자의 이행 노력만으로 결함 가공제품의 원활한 수거·폐기 등이 어려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유관기관이 협조·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 다. 수거, 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
2. 가공제품이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3.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았을 때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조치에 필요한 협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가공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동일·유사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하여 허가·인증·등록·신고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동일·유사제품의 수거·폐기·보완 명령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해당 가공제품의 최종 구매자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수거·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에 수거·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해당 가공제품의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거·폐기 등의 조치에 필요한 방사선 측정, 안전지침 제공 등의 기술

지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가공제품의 사용중지를 권고할 수 있고 제조국가, 제조·판매업체명, 종류·품명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합 가공제품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제조업자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6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u>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생략)</p> <p>③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16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u></p> <p>1. <u>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u></p> <p>2. <u>가공제품이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u></p> <p>3. <u>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았을 때</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u></p>

<후단 신설>

<신 설>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조치에 필요한 협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가공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동일·유사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하여 허가·인증·등록·신고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동일·유사제품의 수거·폐기·보완 명령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해당 가공제품의 최종 구매

<신 설>

자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제17조의2(수거·폐기 등의 책임
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
한 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는 국내에 수거·폐기 등의 책
임자가 없는 가공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함께 해당 가공제품의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추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수거·폐기 등의 조치
에 필요한 방사선 측정, 안전지
침 제공 등의 기술지원을 원자
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에 따른 가공제품의 사용중지
를 권고할 수 있고 제조국가,

제31조(과태료) 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조·판매업체명, 종류·품명 등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

<p><u><신 설></u></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 (생 략)</p> <p><u>3의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 공개 및 보완, 교환,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u></p> <p>3의3. ~ 5. (생 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5의2. (생 략)</p> <p><u>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u></p> <p>7. ~ 10. (생 략)</p> <p>④ · ⑤ (생 략)</p>	<p><u>한 자</u></p> <p><u>5.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u></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3의3. ~ 5.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5의2.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7. ~ 10.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	--